사육농가도 모르는 소 전염병 확산…백신·방역 대책 시급

영광서 폐사한 소 26마리 중 9마리 바이러스성 설사병 BVD 감염
알려지지 않은 탓에 감염된 소 방치…일부 농가 90% 감염 흔적도
성장 장애·면역력 저하로 다른 질병에도 취약…선제적 대응 필요

최근 영광군을 중심으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감염된 소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일부 농가는 사육 중인 소의 90% 이상에게서 감염 흔적이 발견되는 등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수조사나 선제적인 방역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리 알고 진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질병 검사나 백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면역력 저하로 폐사한 소 26마리를 감정한 결과 9마리(35%)가 BVD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4월 영광군 공공 수의사들이 설사 증상을 보인 소 129마리를 간이검사키트(PCR)로 검사한 결과, 126마리(98%)에서 BVD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설사 등 증상이 심해진 영광군의 한 농가를 집중 검사한 결과 소 64마리 중 62마리(97%)에서 BVD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간이검사 결과인 터라 현재도 바이러스를 계속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들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BVD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BVD는 성장 장애, 유산, 기형아 출산, 폐사 등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른 질병에도 취약하게 만드는 급성 전염병이다. BVD에 감염될 경우 소 한 마리당 30~40만원씩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사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폐사율이 높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르는 농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시기가 되면 더욱 위험해지는데, BVD에 감염된 소가 임신을 하면 태반을 통해 바이러스가 송아지에게 전파돼 지속감염우(PI)가 태어난다. 이 송아지는 살아있는 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해 다른 소를 감염시키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되며, 대부분 두살을 넘기지 못하고 폐사하지만 살아남더라도 성장이 느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BVD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지속감염우를 빠르게 발견해 도태시키거나 다른 소의 유입을 막는 차단 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대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농림부 2023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BVD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2021년 207건, 2022년 174건 등에 그쳤다. 전남에선 올 1~3월 4개 농가 5마리 소에서 BVD가 검출됐다고 보고된 것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소들이 감염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가에서 BVD 자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질병 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검출 건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검출 건수가 적은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구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장은 "BVD는 영광뿐 아니라 전국 농가 어디나 상존하고 있는 질병이나 다름없다"며 "지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주는 것도 아니니 농가에서 알아서 방역·소독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BVD 확산에 대비해 조기 진단과 백신 투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올해 예산 1470만원을 들여 소 700두 분량의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을 지원하고, 예산 3850만원을 들여 예방백신을 투여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

전남도 또한 올해 소 3000마리의 분량의 PCR 유전자검사 키트를 구비하고 진단 지원을 할 방침이지만, 이들 대책 모두 사전에 진단을 요청한 농가를 우선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먼저 농가에 질병을 충분히 홍보해 조기 진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국현 전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학계에서도 BVD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이뤄질 만큼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해 농가 인식도 저조하다"며 "농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 백신접종 신청을 하는 등 방역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호남 첫 법교육 전문기관 '광주 솔로몬로파크' 개관

법체험관·법연수관 조성…시민 로스쿨·청소년 캠프 등 운영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호남 첫 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 솔로몬로파크'가 14일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솔로몬로파크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개관 인사를 전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축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영상, 광주 솔로몬로파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도 진행됐다.

솔로몬로파크는 국민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법체험 전시·교육 시설을 갖추고, 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지난 2020년 2월 착공에 들어간 광주 솔로몬로파크는 지상 3층 규모로 대전(2008년)과 부산(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광주 솔로몬로파크에는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이 조성됐고 센터장 등 14명이 근무한다.

헌법·선거·모의 법정〈사진〉·과학 수사 등 다양한 주제의 법체험관 운영과 시민로스쿨, 청소년 캠프, 학교 진로체험 등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주 업무다.

법의날(4월 25일)과 제헌절에는 지역주민 참여형 법페스티벌 문화축제도 연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많은 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개관하는 광주 솔로몬로파크가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는 법 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인다"

전남도, 보성 벌교역·전통시장 일원서 캠페인

전남도가 오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12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17년 378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말 202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남도는 14일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 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성 벌교역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전남도와 도의회, 보성군, 전남경찰청, 전남도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전남교통연수원, 전남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전남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13개 기관 단체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교통안전 손팻말을 들고 벌교역 주변을 걸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생활 속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일상에서 가장 쉽게 노출돼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보와 배려하는 선진 교통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 받았는데 장학금

교육부, 조선간호대 감사 적발

조선간호대가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 및 조선간호대 종합감사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간호대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A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조선간호대 관계자 3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조선간호대는 또 교수가 낸 기부금을 봉사 실적으로 보고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2021년 교수 18명이 낸 기부금 납입액을 30만원당 1점씩 최대 5점을 반영해 평가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의 승진이나 임용, 연구년(안식년) 파견자 선발 등에 활용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선대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있는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관계자 1명이 경고를, 1명이 주의를 받게 됐다.

조선대는 2019년 10월 교직원 B씨가 폭행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다음 달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받기 전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해당 교직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완도 해안가에서 백상아리 사체 발견

완도군의 해안가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피서철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완도군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길이 1m 50㎝에 무게 40여㎏의 백상아리 사체 1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백상아리 사체는 군산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생물이 변화하면서 백상아리가 해안가에 출몰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며 여름철 피서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